
2021 자금세탁방지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

2021. 9.

금 융 위 원 회



목 차



I. 자금세탁방지의 날 포상 개요	1
II. 추천 기준	2
III. 정부포상 기준	4
IV. 신청방법	8
붙임. 정부포상 추천서류 양식	10

I. 자금세탁방지의 날 포상 개요

1. 포상배경

- ☐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년간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을 수여
- ☐ '자금세탁방지의 날' 기념식 및 포상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
2. 포상종류

- ☐ 공모 포상규모: 포장 1개, 대통령표창 1개, 국무총리표창 1개

3. 주요 일정

- ☐ 신청·접수기간: '21.9.1.(수) ~ 9.15.(수)
- ☐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: 9월중
- ☐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: 10월중
- ☐ 포상일시: '21.11.23(화) (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)

II. 추천기준

☐ 금융기관 등 직원

-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에 기여한 자
-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업무협조에 기여도가 높은 자

☐ 공무원

-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·제도 구축, 국제기구 상호평가 수검 유공자, 제도 이행·교육 유공자 등
-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·성공적 운영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

☐ 기타 단체 및 개인

- 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아닐지라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개선·홍보 활동에 기여한 자
-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한 자
-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

Ⅲ. 정부포상 기준

□ 일반기준

- 추천대상은 금융발전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추천할 것
- 공적사항은 실적뿐만 아니라, 노력과 창의에 의한 주위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감안할 것
- 실적은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환경 및 노력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
-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굴·추천하되 직업별·지역별·성별 균형을 유지할 것

□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이상, 포장은 10년이상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,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3년(개인)·2년(단체) 이상 공적이 있을 것

□ 재포상 금지기간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은 3년, 금융위원장 표창은 2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

□ 포상의 제한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,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□ 추천 제한 (다음페이지 세부기준 참고)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(기관장)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-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

◆ 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 ◆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) 형사처분

- 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나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마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바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가능
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이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- 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의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9)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

-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자는 아래표의 기간동안 표창을 제한

<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>

구분	개인(임원)	개인(직원)	기관	제한기간
중징계	해임권고	면직	허가취소	4년
	직무정지	정직	업무정지	3년
	문책적경고	감봉	시정명령	2년
			기관경고	
경징계	주의적경고	견책	기관주의	1년
	주의	주의/경고		

IV. 신청 방법 (기관추천, 국민추천)

※ 신청시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**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홍종민 주무관(02-2100-1752)으로 **연락** 부탁드립니다.

1. 기관추천

□ 제출서류*

* **반드시 붙임(9~14페이지)의 양식을 사용**해야하며 기관 자체적인 공적조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① [붙임1] 추천 기관별 총괄표
- ② 포상후보자 관련서류 (아래 표)

구분	제출서류
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[붙임2] 공적조서 1부- [붙임3] 공적요약서 1부- [붙임4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- 공적 증빙 자료 <p>※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(군인 등 포함) :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「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」 추가</p>
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[붙임2] 공적조서 1부- [붙임3] 공적요약서 1부- [붙임5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- 공적 증빙 자료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※ 공문, 공적조서, 공적요약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원본 제출

□ 접수 방법 : 우편접수 원칙

*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원칙이나, **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접수 미운영 단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방문접수 허용**

** 전자문서 발송 가능기관은 우편접수와 함께 온라인 공문발송도 필수

1. 공문제목: "2021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"

2. 첨부파일

① 후보자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묶은 뒤 첨부
(파일명: "[자금세탁방지]후보자 이름.pdf")

② [붙임1] 추천 기관별 총괄표

□ 주 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
홍종민 주무관

2. 국민추천

※ **국민추천제**: 금융발전에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기관 외에도 **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 가능한「국민추천제」**를 시행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본인 및 단체 자체추천은 불가능)

□ 접수 방법 :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*

* 국민추천에 한하여 이메일접수도 가능 함. 이메일 제출 시 '국민추천서' 및 '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'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
(홍종민 주무관(hongjm12@korea.kr))

□ 주 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14층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
홍종민 주무관

□ 제출서류* (원본) : ① [붙임4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② [붙임5] 국민추천서 1부
③ 공적 증빙 자료

* **반드시 붙임(9~14페이지)의 양식을 사용**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
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추천 기관별 총괄표

1. 후보자 소속 기관명 : _____

2. 추천 담당자 성명·직위 : _____

3. 추천 담당자 연락처(회사) : _____

4. 추천 담당자 이메일 : _____

5. 추천한 포상후보자 총괄표

연번	부문	소속	직위	성명	수공기간	포상·징계	포상 개인	후보자 연락처*
1	예)자금세탁 방지							
2								
3								

* 포상대상자 선정시 행사일정 등 안내 목적

※ [필수] 기관별 추천 담당자는 정부포상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
다음의 파일·정보를 꼭 보관·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.

- ❶ 포상후보자의 개인/직장 연락처
- ❷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한글/워드본 (“공적내용”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파일)
- ❸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파일 pdf본(스캔본)

[붙임 2]

공적조서

(앞 쪽)

성명	(한자)		
주민등록번호	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	군번(군인인 경우)	
	추천자 조희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13자리 모두 기재	국적(외국인인 경우)	
주소	[도로명 주소 기재]		
직업		소속	법적 명칭 (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)
직위		직급 · 계급	
추천 훈격(勳格)	(공란)	추천 순위	(공란)
공적 분야	“자금세탁방지 부문”	공적 기간	○년○월로 기재 (예)7년 5월 (추천일기준 해당분야 공적기간)
<p>공적 요지 (60~75자(130~150byte) 내외)</p> <p>공적요지는 향후 ○○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“~~에 기여함”으로 표시</p>			
조사자 :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			
소속			
직위(직급 · 계급)		성명	(서명 또는 인)
<p>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2021년 월 일</p> <p>추천관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width: 80px; height: 6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10px auto;">관인</div>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 쪽)

주요 경력	
연 월 일	이력사항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
수여일(연 월 일)	[상별 내용 상세 기재하되,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]
	[훈장·포장·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·금융위원장표창은 반드시 기재]
공적 내용	
<p>○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·계량적·객관적으로 작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-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-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<p>○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(띄어쓰기 포함)</p> <p>*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</p>	

[붙임 3]

공 적 요 약 서

소 속			직급(직위)		
성 명	(한글)	주민등록 번 호	(만 세)		
	(한자)				
재직기간	년 월	[포상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]			
수공기간	년 월	[관련 유공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]			
주요근무 경 력	- - -				
과거포상경력 (장관표창이상) [훈장·포장·대통령 표창·국무총리 표창·금융위원장 표창 반드시 기재]	훈 격	수여일자	징계·형벌 [해당사항 반드시 기재]	종 류	일 자
<p>※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하되 우수제안,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</p> <p>(중고딕 13포인트,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)</p>					
작 성 자 (인사담당자)			확 인 자 (인사담당자)		
직급		성명 (인)	직급		성명 (인)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“신고의무 사항”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제1호의 “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■ 신고의무 사항
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- ※ 「상훈법」 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
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1. . .

성명

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-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「상훈법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-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 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

<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「자금세탁방지의 날」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

추 천 인	성 명* (단체명)		관 계*	(피추천인의)
	연락처*	(휴대전화/전화)		
	전자우편			
피추천인 (포상후보자)	성 명* (단체명)		생년월일*	
	주 소*		근무처 (직업)	
	전 화*	(자 택) (사무실)	휴대전화*	
	주요경력* (기간)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·</div> <div>(~)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·</div> <div>(~)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·</div> <div>(~)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>현</div> <div>(~)</div> </div>		
공적내용*	<p style="color: red;">○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·계량적·객관적으로 작성</p> <p style="color: red;">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</p> <p style="color: red;">-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</p> <p style="color: red;">-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</p> <p style="color: red;">○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</p> <p style="color: red;">*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</p>			

*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

《 추천시 유의사항 》

- ① 피추천인(포상후보자)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근무처, 전화번호(주택·사무실) 등 인적사항과,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
-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피추천인의 성명,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
-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- ⑤ 필수 기재사항(*표시)
 - 추 천 인 : 성명(단체명), 관계(피추천인의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
 - 피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, 공적내용